

: 이 상 구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 0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원론은 국내법우위론을 의미한다.
- ②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③ 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 ④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④

: ④국제재판소는 국제법의 적용이 원칙이므로, 국내법은 원칙적으로 국제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법이라기보다는 사실로 인정된다. ①국내법우위론은 국제법 부인론이므로 오늘날 일원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②헌법이 조약보다 상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헌법에서 명시한 것은 아니다. 헌법 해석을 통해 인정된다. ③이원론에 의하면 조약은 '변형'된다. 일원론의 입장이 '수용'이다.

2) 문 02.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 ②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 ③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 ④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

정답:④

해설: ④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은 학설과 판례이다. UN총회결의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다.

3) 문 03.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총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진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도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ICJ 재판관의 선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된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UN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정답:③

해설: ③ICJ재판관 선출은 총회와 안보리에서 각각 투표하고 절대다수로 결정된다. 절대다수는 관행상 재적과반수로 해석된다. ②안보리가 다루는 사태에 대해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안보리나 기타 회원국을 상대로 한 '권고'가 아니므로 안보리의 허락과 무관하게 총회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문 04.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조에 해당되는 관할권 원칙은?

- ① 속지주의
- ② 속인주의
- ③ 보호주의
- ④ 보편주의

정답:①

해설: ①속지주의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나, 형법 규정상 항공기나 선박 내부사건 역시 속지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범죄인의 국적국의 관할권 행사를 말한다. ③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말한다. ④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말한다.

5) 문 05.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존 국가가 신생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
- ②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상주외교사절을 교환하는 것
- ③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것
- ④ 기존 국가가 독립을 얻은 신생국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정답:①

해설: ①비자발급은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신생국 영사에게 인가장을 발급하거나, 자국이 파견하는 영사에 대해 인가장 발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6) 문 06. 입헌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3국에게 제기되는 승인 문제는?

- ①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
- ② 국가 체제가 변경된 것이므로 국가승인이 필요하다.
- ③ 정부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 ④ 국가 체제와 정부 형태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이 모두 요구된다.

정답:①

해설: ①국가승인은 '신생국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정부승인은 '위헌적 정부변경'을 전제로 한다. 주어진 사례의 경우 신국가의 성립도, 위헌적 정부 변경도 없으므로 국가승인이나 정부승인은 무관하다.

7) 문 07. 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이 난민에게 보장되고 있다.
- ② 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③ 국제이행절차로서 개인통보제도와 국가간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
- ④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정답:④

해설: ④난민인정은 개별 체약국으로 권리며, 다만 UNHCR과의 협력의무가 있다. ①입국권은 없다. 다만, 불법입국만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다만,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여 관련 사정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난민협약상 난민은 '정치적 난민'에 국한된다. 경제적 난민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③개인통보제도나 국가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상 제도가 아니다.

8) 문 0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바르게 짚지은 것은?

- | | 대륙붕 | 배타적 경제수역 |
|--------------|------------|------------|
| ① 중간선 | 형평한 해결 | 형평한 해결 |
| ② 근접성 | 육지의 자연적 연장 | 형평한 해결 |
| ③ 육지의 자연적 연장 | 근접성 | 중간선 |
| ④ 근접성 | 육지의 자연적 연장 | 자원의 공정한 분배 |

정답:①

해설: ①영해의 경우 대항국의 경우 중간선, 인접국은 등거리선을 규정하고 있다.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형평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명시된 국제법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근접성은 주로 극지방의 영토취득 권원(title)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은 대륙붕에 관한 것이나, 이것이 경계획정 원칙은 아니다. ④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형평을 위해 고려할 요소로는 인정되나, 그 자체가 경계획정원칙은 아니다.

9) 문 09.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 ②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③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 ④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답:③

해설: ③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는 신축성메카니즘으로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제도들이다. ②기후변화 관리 책임은 모든 국가들의 공동 책임이나,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이다.

10) 문 10. 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비군사적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강제조치에는 포괄적 제재와 표적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표적국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 ④ 강제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가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③

해설: ③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안보리와 ‘특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①비군사적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사적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다. ②포괄적 제재란 대상국에 대한 전면적 수출입 중단 조치 등을, 표적 제재는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안보리의 관행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결정한다.

11) 문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
- ②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 ③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그리고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④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정답:④

해설: ④유보는 조약의 서명, 수락, 비준, 승인, 가입시에 행한다. 채택이나 확정 단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①유보는 일방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타방 당사국의 수락을 요한다. 이 경우 유보는 유보국과 수락국 상호간에 상대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②유보는 다자조약의 ‘보편성’을 위해 ‘통일성’을 획상시키는 제도로 규정된다. ③유보의 수락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명시적 수락’은 서면에 의한다.

12) 문12.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 (countermeasure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 ① 환경 보호 의무
- ②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
- ③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 ④ UN 헌장에서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의 금지 의무

정답:①

해설: ①ILC초안 제50조에 의하면 대응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의무로 무력 사용금지의무,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따른 기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의무는 대응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타국에 대해 지고 있는 환경보호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13) 문 13.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 사이의 Alabama호 청구 사건은 중재재판(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 ②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타결을 도모하는 방법이 심사(inquiry)이다.
- ③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외교교섭 타결에 조력하는 방법이 주선(good offices)이다.
- ④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방법이 조정(conciliation)이다.

정답:④

해설: ④ 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이다. ①알라바마호 중재사건은 남북전쟁 당시 영국이 남군에 대해 무력지원을 함으로써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북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최초의 중재재판 사례로 인정된다. ②③심사나 주선 역시 비사법적 해결책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14)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 ③ 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②

해설: ② 잠정조치는 원고 또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그리고 재판소의 직권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①선례불구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③또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④권고적 의견 부여는 ICJ의 재량이며, 실제로 권고적 의견 부여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15) 문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한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는 조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GATT 1994 제2조(양허표)
- ② GATT 1994 제3조(내국민대우)

- ③ WTO 제9조(의사결정)
④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

:②

: ②내국민대우규정 개정은 전 회원국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16) 문 1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 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된다.
 - ②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
 - ③ 당사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외교사절의 행위는 개인 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인(私人)에 의한 권리침해는 개인 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 ②자연인만 개인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연인에는 국민과 외국인이 포함된다. ①단, 부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 국내구제완료 원칙은 배제될 수 있다. ③개인청원은 국가 영토 내에 또는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이 제기한다. 따라서 외교사절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청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④사인의 행위 역시 국가의 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개인 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7) 문 1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 ② DSB는 대상협정이 양허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 ③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 ④ 양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가능하다.

정답:④

해설: ④보복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비례성’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①합리적 이행기간에 위반국이 대상협정에 자국의 위반조치를 합치시키지 못한 경우에 합치시킬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이다. ②DSB는 대상협정 상 의무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없다. ③보상은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며, 또한 대상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패소국이 승소국에 대해 관세인하를 단행하는 경우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되어 승소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

- 18) 문 1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해양과학조사
 - ② 인공섬의 설치
 - ③ 풍력발전기 설치
 - ④ 폐기물 투기에 의한 오염 규제

정답:③

해설: ③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생물 비생물 자원 이용권도 주권적 권리이다. ①②④관할권에 해당한다.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 19) 문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 ②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
 - ③ 접수국의 관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에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 ④ 파견국과 접수국 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된다.

정답:②

해설: ②외교관의 개인적 주거 역시 공관지역과 같은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①절대적 면제란 예외가 없다는 의미이다. ③영사공관과 달리 예외가 없다.

- 20) 문 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해양경계의 획정 또는 역사적 만과 관련된 분쟁
 - ②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분쟁
 - ③ 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에 의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UN 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정답:②

해설: ②선택적 배제선언의 대상이 아니다. ①③④선택적 배제는 당사국들의 선언에 의해 특정 분쟁을 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법협약 제298조는 해양경계획정과 역사적 만 또는 역사적 권원에 대한 분쟁, 군사활동에 대한 분쟁,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법집행활동에 대한 분쟁,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분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택적 배제는 네 가지 분쟁 중 선택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전부 에 대해 행할 수도 있다.